



철도 투쟁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철도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벌어진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인력 충원은 커녕 오봉역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 자신이 4조 2교대 근무체계 전환에 필요한 인력 충원 요구를 거부해 놓고 애초 4조 2교대제 도입 자체가 문제였다고 하거나, 힘겨운 입환(차량을 붙이고 떼는) 야간 작업 후 이틀을 쉬는 것을 두고 사실상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해 노동자들의 화를 돋웠다.

게다가 정부는 11월 25일 새벽 오봉역 사고 이후 12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던 작업중지 명령을 기습적으로 해제했다. 오봉역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열차가 다니는 곳인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체수송(파업 파괴)을 위해 안전조

치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서둘러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까지 겪고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앞으로 정원 1241명을 더 줄이겠다고 한다. 신규 노선이 늘어나는데도 말이다. 외주화가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뻤하다.

책임 전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감축도 포함됐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28일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맡아 온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겨진다.

또, 신규 제작 차량의 정비 업무를 제작사(민간)에 넘기겠다고도 한다.

이같은 민영화는 수익성 논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 인상과 노동자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

다. 고물가, 고금리로 노동자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경제 위기와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임금 인상을 통제하고, 성과급 기준을 변경해 임금을 더 낮추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통상임금 확대분도 삭감하려 한다. 불공정한 승진 제도도 노동자들의 불만 대상이다.

철도노조는 이런 정부와 사용자 측의 공격에 맞서 11월 24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안전 규정을 지켜 열차를 운행·점검·보수하는 것이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태업 효과가 있다.

인력 감축 등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도 같은날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첫날부터 열차·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그렇게 해도 끝내 정부와 사용자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12월 2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 혈안인 지금,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것은 옳다. 응원한다.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광범한 지금이 싸울 기회다.

다만, 노조 집행부가 임금 억제 공격에 대한 일부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아쉽다. 통상임금에서 양보안을 낸 것인데, 기관사 등 일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 철도노조 일부 운전지부장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행부에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사용자 측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총액인건비제도) 지침을 손에 쥐고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양보부터 한다"고 꼬집었다.

한 부분의 임금 양보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반목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반대로 정부와 사용자 측에 단호히 맞설 때, 결속력을 높이고 각종 개악을 저지하고 조건을 개선케 할 진정한 투쟁의 동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를 하는 것이다.

당장 파업 효과가 큰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건설 현장이 마비됐다)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됐다. 경총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얼토당토않게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속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 저항을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윤석열 제작 비극에 견주다니 그 뻔뻔함과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 윤석열이야말로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비극을 만든 경찰력 오·남용자 아니던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과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낡은 비극이다. 윤석열의 경찰력 배치 기본 방침에 따라 그날 경찰은 공안(집회 통제),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 경비에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서울 중심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윤 보호를 우선하느라 노동자들의 생존 외침을 깔아뭉개고 있다. 윤석열의 직접 지시에 따라 범정부적 파업 파괴 대책본부(재난안전본부)가 꾸려지고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됐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히 확인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아무 관심

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시험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물류와 국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며 노동자 탄압을 정당화한다.

윤석열이 걱정하는 “국민 경제”는 기업의 경제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을 짓밟아야 기업의 착취 활동이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맞선 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생계비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강경 탄압은 이 파업이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몇새 만에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상이 멈췄고,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 반출입량이 10퍼센트대로 푹 떨어졌다. 철강, 정유 공급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 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일부 마비되고 정부 지출이 떨어졌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안달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서울지하철·철도 파업 등과 결합되는 상황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압은 정부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윤석열 퇴진 정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 정세 속에서 세력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능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만큼, 민주노총 일상 지도부인 상집은 (중집 회의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기자회견, 지역별 집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단 하루일지라도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TV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가?

- 사회민주주의와 정의당

일시 12월 6일 오후 8시
발제 김인식(노동자 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https://bit.ly/1207-meetin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 윤석열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solidarity.org/join